

研究論文

아시아연대의 역사적 교훈: - 아시아민족회의와 아시아연맹의 사례 -

김 경 일*

I. 서론	IV. 조선인의 참가와 국내에서의 반응
II. 회의의 구성과 성격	V. 동아시아와 태평양 국가들의 반응
III. 회의의 경과와 쟁점	VI. 맺음말 아시아연대에 대한 교훈

I. 서론

1920~1940 년대의 이른바 전간기는 세계체제에서 영국의 헤게모니가 아직 지속 되는 가운데 미국이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로서 부상되었던 일종의 과도기였다. 이러한 점에서 보자면 동아시아에서 국제기구와 국제회의는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한 것과 미국이 주도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이 중심 역할을 한 세 가지 조류로 대별될 수 있었다.

대체적인 추세를 보면 유럽 주도에 의한 국제기구의 영향력은 미국 헤게모니의 증대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점차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던 반면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 양상과 아울러 넓은 기반을 가졌던 것은 미국이 주도한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였다. 주로 ‘태평양’이라는 수식어가 흔히 따라다녔던 사실에서 보듯이 이들 기구와 회의들은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 대한 민간 차원에서 미국의 점증하는 영향력 증대라는 전략적 의도에서 이해될 수 있었다.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사회학 전공.

이에 대응하여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헤게모니를 다투고 있었던 일본 역시 아시아를 단위로 하는 국제기구와 회의를 여러 차례에 걸쳐 조직하였다. 이 글은 이들 회의 중에서 1926년 7~8월 일본 나가사키(長崎)와 이듬해인 1927년 11월 중국 상해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아시아민족회의와 이 대회에서 결성된 아시아연맹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한다.

동아시아에서 근대 국가를 가장 일찍이 수립하고 제국주의 대열에 합류하였던 일본이 이 회의를 주도하였던 것은 1924년 5월 15일 미국의회 상·하양원에서 가결된 이민법¹⁾에 포함된 인종차별조항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법안에 강한 굴욕감과 분노를 느낀 일본에서 그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하였던 것을 배경으로 일본에서 아시아의 여러 민족/국가들과 연대하여 서구에 대항하고자 하는 아시아주의적 요구가 강하게 대두된 것이다.²⁾

서구에 대한 동양, 혹은 백인종에 대한 황인종의 인종적 단결에 호소하였던 아시아주의는 서구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의한 식민지/반식민지를 경험하였던 아시아 민족/국가들이 호응할 수 있는 일정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주의의 이념과 당위는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 이해관계와 상충하고 모순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순이 가장 직접적이고 우선적으로 표출되었던 식민지 조선의 경우는 논외로 하더라도 중국의 경우에도 일본이 제창한 아시아주의가 영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와 대항하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중국 침략이라는 제국주의 일본의 현실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아시아민족회의에 대한 분석은 제국주의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모순을 드러냄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의 성격과 지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컨대 비슷한 시기에 미국이 주도하였던 태평양문제연구회(IPR,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와 태평양회의(Pacific Conference)와 비교해 볼 때³⁾ 일본 제국주의의

1) 제안자의 이름을 따 리드-존슨법(the Reed-Johnson Act)으로 알려진 이 법은 아시아인을 포함하는 “바람직하지 않은(undesirable)” 이민자들의 배제를 규정했는데, 그 대상이 주로 일본이었다는 점에서 일본에서는 배일이민법으로 불렸다. 1882년에 제정된 중국인배제법(Chinese Exclusion Act)과 함께 1965년의 이민법이 제정될 때까지 아시아 이민을 제한하였던 대표적인 법이었다.

2) 일본에서 전개된 아시아주의의 구체적인 흐름과 성격에 대해서는 김경일·강창일, 『동아시아에서 아시아주의: 1870~1945년의 일본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제8호(2000) 참조

특수성이 보다 분명하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이 글은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조선을 비롯한 반식민지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그에 대한 반응과 비판의 양상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일본에서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는⁴⁾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선행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글은 이들 소수의 선행 연구들과 일제의 관련 자료를 통해서⁵⁾ 아시아민족회의의 구성과 성격 및 회의의 경과와 쟁점, 그리고 이에 대한 식민지 조선을 비롯한 태평양의 여러 민족국가들의 반응 양상과 비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회의의 구성과 성격

1926년 7-8월 일본 나가사키(長崎)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민족회의의 주최자는 일본의 전아세아협회(全亞細亞協會)와 중국의 아세아민족동맹의 두 단체였다. 일본쪽 주최자인 전아세아협회는 1924년 7월 미국에서 배일이민법의 시행을 전후하여 일본에서 대미대결론 혹은 구미·아시아 대결론이 제기되었던 상황을 배경으로 정우회(政友會) 간사장인 이와사키 이사오(岩崎勳) 등이 발기하여 귀족 중의 원 양원 의원과 실업가, 학자, 신문기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되었다. “아시아민족 중의 선진국인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인의 각성을 촉구”하며, “장래 오려고 하는 인종적 화란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설립 취지에서 보듯이 서구

3) 김경일, 「식민지 시기 국제 민간 기구의 내용과 성격: 태평양문제연구회(IPR)와 태평양회의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39집(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4) 참조

4) Goodman “The Pan-Asiatic Conference of 1926 at Nagasaki,” 福岡ユネスコ協會, *Fukuoka Unesco*, 제8호(1973); 水野直樹, 「1920年代日本・朝鮮・中國におけるアジア認識の一断面-アジア民族會議をめぐる三國の論調」, 古屋哲夫 編, 『近代日本のアジア認識』(東京 綠蔭書房 1996). 전자는 1926년의 제1회 대회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이 회의를 둘러싼 조선과 중국에서의 대응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후자는 양 대회를 둘러싸고 일본과 조선, 중국에서의 그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아시아 인식의 단면을 검토한 것이다.

5) 제1회 및 2회의 아시아민족회의에 대하여 일본 내무성 警保局은 상세한 정보 보고를 작성하여 特秘로 분류, 관리하였다. 이 자료는 『外事警察報』 제8권과 9권(東京 不二出版, 1987)에 수록되어 있다.

에 대한 아시아인의 단결을 주장하는 아시아주의의 흐름에서 조직된 단체였다.⁶⁾

일본의 보수정당인 정우회에서 발기한 만큼 특히 중국에서는 이 협회가 당시 정우회 총재였던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나 아시아주의자로 대만의 식민지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던 고토 신페이(後藤新平)⁷⁾ 등이 주도한 것으로 보았다.⁸⁾ 중국의 『시사신보』가 논평했듯이 협회의 조직이 궁극적으로는 일본 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협회의 결성을 주도한 정당관계자들과 일본 정부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 외무성이 회의의 개최에 비협력적 태도를 보였다는 일본 신문의 보도⁹⁾ 혹은 회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단속이 엄중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러시아의 신문 보도¹⁰⁾가 주목된다.

나아가서 배일이민법으로 표출된 미국의 차별 대우에 분노하는 민간의 여론과 이른바 워싱턴체제 아래에서 영·미에 대한 협조라는 유희노선을 기본으로 하였던 일본 정부의 입장 사이에도 미묘한 갈등 관계가 있었다. 일본에서 발간된 몇몇 신문들이 아시아민족대회에 대한 일본정부의 자세가 구미 열강과의 관계가 악화할 것을 우려한 ‘비상식’적이고 ‘대인답지 않은 태도’, ‘웃음거리(噴飯事)’라고 비판하였던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¹¹⁾

중국의 아세아민족대동맹은 1925년 8월 3일 북경에 거주하는 중국인, 인도인,

6) 水野直樹, 앞의 글, 510-511쪽 참조.

7) 전자는 군인출신으로 1925년에 예편하여 정우회 총재가 되었으며 1927년 수상에 취임하여 중국에 대한 강경 외교를 주도하였다. 후자는 1898년 대만 민정장관을 거쳐 1906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총재, 1916년 내무대신에서 끝이외무대신이 되었다. 동양협회회장으로 이른바 대아시아주의에 기초한 식민정책을 주도하였다. 각각 黒龍會 編, 『東亞先覺志士記傳(下)』(東京: 原書房, 1966), 264~266쪽 및 555-556쪽 참조.

8) 예컨대 『時事新報』는 「시론」에서 일본측의 전아세아협회에는 後藤新平 등이 관여하고 있고 일본의 정부·군벌을 이롭게 함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上海各路商界總聯合會는 아시아민족 회의에 대한 비판에서 이 두 사람이 협회를 발기한 것은 명확하다고 단정하였다. 각각 水野直樹, 앞의 글, 535쪽 및 내무성 경보국, 제67호, 73쪽 참조.

9) 7월 17일의 『神戸又新日報』는 “아시아민족회의에 외무성의 압박”을 가하는 “상당히 과격한 의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水野直樹(위의 글, 512-513쪽)는 실제로 압박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불명확하지만 협조적이지 아니었던 것은 확실하다고 보았다.

10) 하얼빈에서 발행하는 『노보스타나 지즈니』의 보도로 내무성 경보국, 제50호, 109쪽 참조.

11) 水野直樹, 앞의 글, 521쪽.

일본인, 조선인 등이 참가하여¹²⁾ “아시아의 각 민족이 연합하여 세계의 제국주의에 반항”할 것을 목적으로 조직한 것이라고 한다. 중국에서 배외 운동이 일어난 뒤로 아세아 약소민족은 연합하여 대동단결의 기치를 들어야 한다는 각성을 배경으로 조직된 것인데,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중국의 이 단체가 일본이 주도한 아시아민족회의의 개최에 호응하였던 것은 중국에서 5·30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반영(反英) 기운이 고조되었던 것을 배경으로 일본과 제휴함으로써 반영운동을 고조하려는데 있었다.¹³⁾

비록 두 나라 사이에서 회의의 개최가 합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준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일본에서는 이사회 내부의 사정과 더불어 구미 제국과의 관계 악화나 조선·대만의 독립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한 헌정회 계열의 대의사가 참석을 취소함에 따라 회의 규모가 축소되었다.¹⁴⁾ 이에 따라 준비위원회와 본회의의 일자 또한 연기되었다. 개최 장소도 원래는 상해로 잡혀 있었는데 상해와 같이 각국이 자유롭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어렵게 모인 참가국 사람들이 의외의 압박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회의 장소를 일본의 나가사키로 변경하였다.¹⁵⁾

이리하여 개최된 제1회 아시아민족대회는 1926년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의 거의 20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회의는 사실상 일본의 전아세아협회 이사이자 대의사였던 이마사토준타로(今里準太郎)가 주도하였다. 회의에는 일본인 14명, 조선인 2명, 중국인 12명, 인도인 7명, 필리핀 1명의 모두 36명이 정식대표라는 이름으로 참가하였다.¹⁶⁾ 그러나 각 국의 대표자들은 해당 국가에서 정식으로 추천을 받았다

12) 조선인의 참가에 대하여 水野直樹(511쪽)는 “조선인은 일본인에 대한 불신으로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인이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데, 동아일보 1925년 8월 13일자는 이 회의에 참석한 조선인 金弘善이 “대회 벽두에 그 자리에 참석한 일본사람에게 동회의 종지(宗旨)에 공명 여부를 물어 동감의 뜻을 들은 후 의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하였다

13) 위의 글, 511~512쪽.

14) 위의 글, 512쪽.

15) 특히 인도,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의 피압박민족에서 이러한 우려가 컸다고 한다. 내무성 경보국 제50호, 105쪽 참조

16) 인도는 아프가니스탄 대표를 포함한 수치이다. 그런데 水野直樹 앞의 글 514쪽 에 의하면 일본인이 이보다 2명이 적은 12명으로 모두 34 명이며 중국인에는 베트남인 1 명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기보다는 단순히 특정 단체나 개인 스스로 대표로 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우에도 그러했지만, 후술하듯이 조선의 경우에도 이들 ‘대표 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제2회 대회는 1927년 11월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었다.¹⁷⁾ 일본에서는 이마사토를 비롯하여 16명이 참석하였으며, 중국은 당초 13 명이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회의 때마다 바뀌가면서 11명이 더하여 연인원 24명이 참가하였다. 이밖에 인도에서는 상해에 체류하고 있었던 5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라자 마헨드라 프라타프(Raja Mahendra Pratap)의 1인이 참가하였다.¹⁸⁾

일본 대표의 구성을 보면 1930년대에 아시아협회를 주관하는 나카타니 타케요(中谷武世)와¹⁹⁾ 전아세아협회 및 범아세아청년연맹, 극동연맹협회의 관계자들 언

17) 대회 장소로 한 때 북경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중국의 반발로 상해로 결정된 것이다. 水野直樹 앞의 글, 514쪽)는 대회 장소가 바뀐 이유로 “회의 주최자가 국공합작 붕괴 후의 중국국민당에 어떠한 지원을 바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고 하였지만 북경이 일본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점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대동맹에 반대하는 중국국민당 상해특별시당부의 선언에서 “아시아연맹의 소위 최고위원회의 설치 장소는 상해도 아니고 남경도 아니고 오히려 萬惡 군벌 張作霖의 근거지인 북경에 있다. 이는 목하 북경이 완전히 일본제국주의자의 보호 아래 있는 까닭이다. 이와 같이 하면 이들은 일체의 강제 조종의 수단을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내무성 경보국, 제67호, 72쪽 참조

18) 아프간의 대표로 참석하기는 했지만 그는 원래 인도인으로 1915년 카불에 독립인도 임시정부를 수립한 인물이다. 인도독립을 위해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1차 대전이 발발했을 무렵 유럽에 있었지만 그 후 아프가니스탄으로 옮겨 아프간 국적을 얻었다.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중국 몽고 티베트 등지에서 모집한 의용군으로 아시아군을 조직해 그 힘으로 인도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활동하였던 그는 네루로부터 “공중누각을 지으려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몽상가이자 현실을 떠난 이상주의자였다. A. M. Nair, *An Indian Fighter in Japan* (김세중 역, 『인도독립투쟁』 일월서각, 1986, 96-98쪽). Joyce Chapman Lebra, *Jungle Alliance: Japan and the Indian National Army*(Singapore: D. Moore for Asia Pacific Press, 1971) 및 다음 URL 참조 <http://www.allaboutsikhs.com/events/ghadar3.htm>. 또한 내무성 경보국, 위의 책, 43-44쪽 참조. 水野直樹(앞의 글, 514쪽)는 인도 대표로 라스 비하리 보스(Ras Bihari Bos)가 참석하였다고 하는데 내무성 경보국 자료의 명단에 나와 있는 5명의 인도 대표에는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19) 동경대 출신으로 1924년 4월에 창립된 行地社와 北一輝의 猶存社 등에서 활동하다가 1927년 전 일본興國동지회를 창립하여 기관지로 『일본주의운동』을 발행하면서 특히 노동자·농민운동의 일본주의화에 노력하였다. 1932년 4월에 下中弥三郎, 滿川龜太郎 등과 인도의 라스 비하리 보스, 안남의 콘디 등과 함께 아세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를 표방하는 범아세아협회를 조직하고, 이어서 육군대장 松井石根, 近衛文麿 등을 발기인으로 하는 대아세아협회를 설립하였다 창립대회에는 일본의 정계, 학계, 군부 등의 상층부 인사 백 수십 명이 참가하였는데 그는 이 협회의 이

론계 인사들, 해운업자, 승려(日蓮宗蒙古特命開教師) 등이 참석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일본대표는 서로 잘 아는 사이라기보다는 정치운동이나 호기심, 단순히 연구하려는 마음 등으로 참여의 동기가 다양하였다.²⁰⁾ 회의에서 중심 역할을 한 사람은 주최자인 이마사토와 새로 참석한 나카타니 정도의 2,3 명에 그치고 나머지는 이름만 출석하였는데, 그나마 나카타니는 본회의를 성립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마사토는 형식적으로라도 회의를 성립시킬 것을 극력 주장하여 의견이 대립되었다.²¹⁾

중국에서는 범아세아민족연맹, 세계학회 관계자들, 언론계 대학 인사들과 아울러 일본과는 달리 상해시나 浙江省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였다. 중국 대표의 중심인물은 황공소와 아울러 石瑛(兵工廠主席委員), 吳山(中華全國道路建設協會總幹事) 등이었는데 이들 내부에도 일본에 대한 입장이나 이념적 지향에서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연맹 창립부터 대회를 주도하였던 황공소와 吳山, 石瑛 등은 같은 국민당원이지만, 일제 자료에 의하면 오산은 ‘유명한 排日家’였던 반면에 석영은 ‘비교적 주의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²²⁾ 오산은 여운형, 김규식 등이 참가하여 1921년 5월 상해에서 조직한 中韓國民互助社總社의 정이사장으로도 활동한 인물이었다.²³⁾

사장으로 활동하였다. 1934~1935년에 다른 우익단체들과 함께 국가개조청원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1940년 이후 중국에서 민족협화주의에 입각하여 동아연맹의 결성을 주장한 汪精衛 등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동아연맹이 “일본인의 臣道를 무시하고 대동아에서(일본의) 지도적인 입장을 망각하여 황국의 세계사적 입장을 알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대아세아협회는 홍아동맹을 결성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사상권 안으로 포섭되어 갔다. 近代日本社會運動史人物大事典 編輯委員會 『近代日本社會運動史人物大事典』 卷 三 東京: 日外アソシエツ, 1997), 667~668쪽 및 橋川文三, 「大東亞共榮圈の理念と實態」 『日本歴史』 21(東京: 岩波書店, 1977), 293~294쪽 참조

20) 따라서 회의에 대비하여 미리서부터 연구해 온 경우가 적고, 서로 기맥을 통해 회의의 수행에 노력하는 일치단결을 결여하여 의견이 구구하였다고 한다. 내무성 경보국, 제67호, 63쪽.

21) 위의 책, 64쪽.

22) 위의 책, 44~45쪽 및 64쪽 참조

23) 3·1운동과 5·4운동 이후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한·중 인민의 연대조직이 中韓國民互助社(Sino-Korean Mutual Aid Society)라는 이름으로 중국 각지에서 출현하였다. 전국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설립된 상해의 이 조직에서 김규식은 부이사장을, 여운형은 교제과(交際科) 책임을 맡았다. 孫安石, 「1920年代 上海の中朝連帶組織 中韓國民互助社の成立, 構成, 活動を中心に」 『中國研究月報』 Vol. 50, No. 1, 1996년 1월호, 20쪽 참조.

III. 회의의 경과와 쟁점

아시아민족회의는 준비위원회에서 본회의 일정과 의사를 결정하고 회의 잠정 규약을 정한 다음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회의 이전의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첨예한 의견 대립은 대회의 난항을 예고 하였다. 회의의 최대의 문제는 이른바 중국에 대한 일본의 21개조 요구였다.²⁴⁾ 중국대표단이 21개조 요구의 철폐에 관한 제의를 승인할 것을 요구하자 일본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중국은 자신의 제의가 승인되지 않으면 회의에서 탈퇴하겠다고 언명하였으며, 일본 정우본당계의 대의사 13 인은 중국이 요구를 취소하지 않으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퇴장하였다.²⁵⁾ 이러한 대립 상태에서 인도 대표인 보스가 개입하여 중국과 일본 사이의 “불평등조약은 전아시아 민족 단결에 장애가 되므로 상호 성의를 가지고 취소하도록 노력한다”는 요지의 결의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 본회의가 열리게 되었다.²⁶⁾

8월 1일 기독교청년회관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각 나라/민족 대표는 자국어로 연설을 하였다. 이와 아울러 전아시아연맹을 결성할 것을 결정하고 잠정 규약을 발표하였다.²⁷⁾ 연맹의 이사로는 일본에서 이마사또와 오가와 슈메이(大川周明), 중

24)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 열강이 동아시아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일본은 1915년 독일 조차지 자오저우만(膠州灣)을 점령하고 산둥성(山東省)의 독일 이권을 접수한 뒤, 중국 정부에 제국주의적인 21개조를 요구하였다. 대전이 끝나고 파리에서 평화회의를 연 전승국들은 형식적으로나마 동맹의 일원이었던 중국을 무시하고 일본의 요구를 승인하였으며, 이에 반대하는 베이징의 시위는 텐진(天津)·상하이(上海)·난징(南京) 등 주요 도시로 파급되면서 반일 운동을 고조시켰다.

25) 내무성 경보국, 제50호, 106쪽 및 水野直樹 앞의 글 513 쪽

26) 동아일보의 보도(1926년 7월 17일자)에 의하면 일본에 대하여 중국은 1) 아췌(亞細) 피압박민족을 부조할 일, 2) 호상간의 불평등 조약을 廢除하여 전 아췌의 영구화평을 유지할 일, 3) 전 아췌에 각각 흠어져 있는 거류민은 호상평등으로 대우할 일, 4) 일본이 자동적으로 대거의 일체 불평 조약을 취소할 일 등의 4조항을 제안하였지만, 통과될 희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하였다고 한다.

27) 연맹의 목적은 “평등의 정의를 기초로 하는 항구적 세계평화를 실현하고 이에 국제적 인종적 및 종교적 차별을 불식하는 동인종의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며(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아시아의 정신적 및 물질적 문화의 부흥 2. 국제간에 현존하는 불평등조약의 철폐 및 각 민간의 차별대우 철폐, 3. 문화적, 경제적 및 정치적 방면에서 아시아민족의 제휴, 4. 아시아 생산품의 사용 및 아시아 각 국의 산업 장려를 실현하기에 노력할 것”을 선언

국에서 황공소(黃攻素), 임경려(林耕餘), 인도의 보스 등의 8 명이 지명·선출되었다.²⁸⁾ 둘째 날의 회의는 신문기자 및 경찰관을 제외한 일반의 방청을 금지한 상황에서 각국 대표 위원 15 명이 참가한 가운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래의 안건들을 논의하였다.

1. 아시아 통신기관 설치의 건
2. 아시아 횡단철도 건설의 건
3. 아시아회관 건설의 건
4. 금융기관 설치의 건
5. 아시아농업기관 설치의 건
6. 전아시아민족공통어 연구의 건
7. 인종평등안 통과 협력의 건
8. 중일친선의 저해는 양국간의 오해에서 오는 사실에 비추어 전아시아연맹에 연구기관의 설치에 관한 건
9. 아시아대학 창설의 건
10. 일본의 지나인 노동자 입국취체령 취소의 건
11. 전아시아 민족을 표장(標徵) 하는 기 및 마크의 제정의 건²⁹⁾

제1항부터 8항까지는 일본이, 9항과 10항은 중국이, 그리고 마지막의 11항은 중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안한 것인데, 일본은 아시아통신기관설치나 횡단철도의 건설, 금융기관과 농업기관의 설립과 같이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관심을 보였다. 일본의 이러한 제안은 후술하듯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공세라는 중국의 의구심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제7항의 인종평등안은 미국의 이른바 배일법안에 대한 아시아 공동의 대응이라는 모양새를 갖추어 이 법안에 대한 일본의 비판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명분상으로는 인종의 평등을 내걸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로 백인종에 대한 황인종의 단결을 주장하는 배타성을 내포

하였다. 내무성 경보국, 제50호, 107쪽 참조

28) 이사의 선출은 회의의 마지막 날인 8월 3일에 있었다

29) 이 중에서 5항만 유보되고 나머지는 모든 통과·가결되었다고 하는데(내무성 경보국, 제50호, 108쪽), 水野直樹(앞의 글, 513쪽)에 따르면 제2항의 아시아횡단철도건설과 4항의 금융기관설치 및 제5항의 아시아농업기관 설치에 대한 결의안이 유보 내지는 특별위원회로 넘겨졌다고 한다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대회의 3일째에 인도 대표 보스가 긴급동의의 형식으로 “연맹의 목적에 찬성하고 또 그것을 달성하는데 조력하는 백색인과 제휴”하자는 안건을 제출한 것은 이와는 다른 흐름을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³⁰⁾

중국은 일본의 중국인노동자 입국에 대한 통제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다. 미국을 포함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구 이동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일본 인구의 미국 이입에 대한 미국의 통제가 배일법안으로 구체화되었다고 한다면 중국 노동력의 일본 이입을 일본이 통제하는 것에 대한 중국 측의 이의 제기라고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제안한 아시아회관이나 아시아공통어 연구, 혹은 중국이 제기한 아세아대학창설, 두 나라 공동이 발의한 공동의 기와 마크의 제정 등과 같이 아시아 공동의 언어와 상징 등을 만들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제안되었던 사실도 흥미롭다.³¹⁾ 3일째 계속된 회의는 다음 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연맹가가 합창되는 가운데 폐막되었다.

제2회 대회는 1927년 10월 초 상해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중국 대표 황공소가 국민당 간부 胡漢民과 사적으로 알고 지내는 관계를 이용하여 국민당의 원조를 받아 개최한 것이었지만 상해특별시 국민당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당 내부에서조차 이 회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³²⁾ 이러한 사정으로 회의의 관계자들은 본회의를 거행할 때까지 모든 내용을 비밀로 할 것과 국민정부에 회의의 내용을 알려 본회의가 일본정부의 대외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표명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30) 내무성 경보국, 제50호, 108쪽 참조. 인도에서 명망 높은 혁명가로서 그는 간디와 대조적으로 테러행위에 호소한 대중적 폭동의 방식을 선호하였다. 그는 ‘니사카마 카르마’, 즉 보수에 대한 집착이나 욕망을 버린 무집착의 업이라는 교의에 입각한 양심에 따른 행동을 주장하였다. 1915년 6월 일본에 망명한 그는 당시의 수상이었던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나 겐요샤(玄洋社)의 두산만(頭山滿) 등과 친교를 유지하면서 인도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A. M. Nair, 앞의 책 특히 제8장, Joyce Chapman Lebra, 앞의 책 및 <http://www.allaboutsikhs.com/events/ghadar3.htm> 참조

31) 회의의 마지막 날 폐회식에서 연맹가를 합창하였다는 언급으로 미루어 보아 노래도 제정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내무성 경보국, 위의 책, 108쪽 참조

32) 중국은 대표인 황공소를 제외하고는 일본 대표들이 “다나카(田中) 수상의 의향을 받들고 있다”고 믿어 회의에 대하여 매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일본 대표 이마사또에 대하여 “田中수상과 양해가 있어, 그 쪽에서 비용 보조를 받았으므로 이번 회의에 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던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내무성 경보국, 제67호, 42~46쪽 및 63쪽 참조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회의는 제1회 대회에 이어 또다시 중국과 일본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제1회 대회가 일본의 의사대로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었던 것과 달리,³³⁾ 이번 대회에서 일본은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베트남이나 인도 등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신뢰도 얻지 못하였다. 오히려 이들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 하면서 일본의 제안을 비판하였다. 아시아 국가로부터 일본에 대한 첫 번째 비판은 우여곡절 끝에 11월 2일 열린 제 1회 준비위원회에서 베트남 대표가 연맹에 보낸 서간을 통해서 제기되었다.

회의에서 대독된 베트남 혁명당 阮尙玄의 선언문은 먼저 아시아연맹의 목적이 전아시아의 각 민족과 연합하여 구미제국주의의 침략에 저항함으로써 공존공영, 세계평화의 실현을 기하는 데 있다는 점을 환기하는 데서 시작하였다. 이어서 그는 연맹의 근본 문제는 “연맹의 구성분자의 건전한 여부”에 있는 바, 현재 아시아의 각 민족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압박의 민족이고, 일본은 다른 민족의 억압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피압박 민족을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마땅히 각 피압박의 민족을 원조하고 노력 분투하여 모든 제국주의의 기반으로부터 탈출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연맹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근본문제는 아시아 피압박 민족의 혁명을 성공시켜 자유·독립하게 함으로써 “연맹의 건전한 분자로 변성시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일본이 제안한 아시아횡단철도의 건설이나 금융기관의 설립 등의 문제는 “확실하지 않고 迂闊한 사정을 면치 못한다”고 비판하였다.³⁴⁾ 왜냐하면 그러한 사업은 아시아의 각 민족이 우선 정치적·경제적으로 독립한 후 비로소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는 아세아횡단철도나 금융

33) 2차 회의 개막 전날의 만찬회에서 중국은 작년 나가사키에서 열린 제1회 회의에서는 일본인의 우롱을 받았으므로 이번 회의에는 일본대표를 우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위의 책 43 쪽 참조.

34) 이로 미루어 볼 때 정식 회의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1회 대회에서 일본이 제안한 중앙은행의 설립이나 중앙철도의 부설 문제를 일본은 상해 대회에서 다시 제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대표의 1인인 石瑛 역시 이 두 문제를 “자국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의 일종의 경제침략정책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술회하였다. 위의 책 77 쪽 참조.

기관의 설립을 제국주의 경제 침략의 도구라는 시각에서 이해하면서, 일본이 아세아연맹의 결성을 제창한 것도 일본제국주의를 위한 “일종의 어용 사업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그는 아시아민족이 제국주의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아시아 피압박해방 운동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해 볼 때 중국혁명을 원조하는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런데 중국이 받는 압박의 대부분은 일본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중국혁명의 원조에서 가장 유력자는 일본 민족이고, 따라서 연맹에 가입한 일본 민중은 한편으로는 일본정부가 암암리에 중국군벌을 도와 국민혁명을 파괴하는 행위를 극력 저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민중과 악수하여 일본정부가 중국을 침략하는 일체의 행동을 방지할 것을 각성시켜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³⁵⁾

이후의 회의는 각국 대표들이 각각 자국어로 제안 설명을 하고 통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본의 제안은 제1회 대회에서도 제기되었던 (1) 인종차별의 철폐, (2) 동양평화를 위해 싱가포르 및 진주만에 해군근거지의 철폐 권고, (3) 강대국의 이익 확보에만 주력하는 국제연맹에 대한 반성의 촉구 등이었다.³⁶⁾ 중국의 제안은 다음과 같이 주로 중·일 사이의 현안에 집중되었다.

1. 아세아주에서 모든 제국주의의 활동에 반항할 것.
2. 일본에 대하여 제국주의를 포기하고 전아시아민족을 평등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그 조건으로는
 - (1) 만몽침략의 적극 정책을 정지할 것.
 - (2) 중국의 관세자주를 원조할 것
 - (3) 작년 결의한 중·일 사이 및 기타 모든 불평등조약 폐지의 건은 속히 실행하고 6개월 이내에 평등의 원칙에 의해 중화국민정부와 새로이 통상조약을 체결할 것.

35) 위의 책, 52~54쪽.

36) 회의가 폐막된 이후에 상해특별시당부 선전부장인 陳德徵은 인종불평등대우 철폐안이나 싱가포르 방어 철폐안 등은 일본제국주의를 주장하고 일본제국주의에 절대적인 이익을 주는 것으로, 이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아시아민족회의라는 것이 실로 일본제국주의의 어용기관이라고 믿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위의 책, 76쪽 참조.

- (4) 중국 각지 주재의 군함·군대를 철수할 것
- (5) 대만 민중의 자결을 임의로 할 것
- (6) 조선을 중종의 압박에서 해방할 것.³⁷⁾
- 3. 전아세아약소민족의 자결을 협력 원조할 것
- 4. 영국의 상해 영공 침략에 반항할 것.
- 5. 평소 아시아민족에 찬동원조를 성명하고 있는 백색인종 이외에 미국하원의원 포라, 영국대학교수 루소, 러시아 전육군대신 트로츠키에 본 연맹에서 명예를 수여하여 공정한 태도를 취할 것.³⁸⁾

이에 대하여 일본 대표는 이는 중·일 두 나라 사이의 문제이므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다음에 등단한 인도대표 샤스트리(Hari Prasad Shastri) 역시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일본에 대한 “도발적인 私案을 제출”하였다.³⁹⁾ 먼저 그는 일본이 현재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특수권익을 포기하고 6개월 이내에 중·일 평등의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장하였다. 만약 일본이 불응한다면 일본은 회의에 열석할 자격이 없는 동시에 인도는 곧 본회의에서 탈퇴한다고 그는 언명하였다. 또한 아세아연맹회의는 아무 곳에서 열려도 무방하므로 회의의 장소를 바꿀 필요 없이 영구히 중국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와 아울러 그는 아세아연맹회의 개최의 목적이 전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있는 이상 단순히 아시아뿐만 아니라 동서양을 불문하고 세계 각국을 망라한 연맹회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⁰⁾

그러나 일본은 샤스트리의 이 제안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때문에 위원회는 힘악

37) 만약 일본이 가장 짧은 시기에 실행하지 않는다면 본 회의가 제창하는 아시아민족 자유·평등의 주지와 극단으로 배치하므로 내년의 제3회 대회에서는 본회의 취지와 상반하는 민족 대표의 출석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언명하였다. 위의 책, 48쪽.

38) 위의 책, 48쪽.

39) 1916년 일본에 와서 2년 정도 체류하면서 도쿄대학과 와세다대학 등에서 가르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손문의 초대로 1918년 중국으로 건너가서 11년을 머물렀다. 상해 화동사범대의 외국어학과장과 남광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는 동양과 서양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The Asiatic Review*를 발간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shanti-sadan.org/hps.htm> 참조. 인도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 호주 시드니대학 일본·한국학과의 Pankaj N. Mohan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40) 내무성 경보국, 제67호, 49쪽.

한 분위기에서 아무 것도 가결하지 못하고 산회하고 말았다. 이후에도 준비위원회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4회에 걸쳐 회 수를 거듭해 가면서 열렸지만 중국과 일본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제3차 준비위원회에서 중국 대표 오산(吳山)이 일본의 ‘만몽 침략 운운의 배일적 언어’로 ‘아시아민족해방의 가면을 쓴 제국주의자’라고 일본 대표를 비판하면서 퇴장 직전까지 이르렀던 사실에서 단적으로 보듯이 41) 대회는 거의 결렬에 다다른 듯이 보였다.

7일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일종의 절충안으로 공동 제안과 아울러 일본안과 중국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다. 공동 제안은 아프간대표 프라탑이 발의한 것으로, 아시아 민족 사이의 통상관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업가와의 접촉 연락을 유지하고 이를 권유하여 아시아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요 도시에 수출입 무역회사를 개설하며, 아시아 각국의 연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아시아 교육기관을 시행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그의 제안에서 이채로운 점은 아시아연맹이 기관지를 주간으로 발행하되 가급적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중국어나 일본어, 인도어, 페르시아어 등을 보완하여 사용하지는 것이었다. 42)

일본안은 (1) 인종차별을 철폐하자, (2) 동양평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해군근거지의 철폐를 권고하되, 1차 준비위원회에서 제안한 진주만 건은 제외하는 것으로 후퇴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국은 (1) 중국관세자주를 원조하고 일체의 치외법권을 회수할 것, (2) 작년 통과된 중일간 및 전아시아 일체의 불평등조약의 취소를 실행할 것, (3) 일본의 대중정책으로 중국의 감정을 해치는 것, 그 중에서 일본의 만몽정책은 반드시 교정할 것, (4) 아시아 각 약소민족을 여러 압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영국의 중국 영공의 침공에 반항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실제 본회의는 중국이 그 대회 전날인 6일부터 12일까지 계엄령을 선포하여 모든 정치집회를 금지하여 중국 군경이 해산을 종용했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 의미가 아닌 단순한 간담회 형식을 빌려 진행되었다. 대회에 반대하였던 국민당 상해특별시당부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이 대회를 염두에 두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인지의 여부는 불명확하다. 이와 같이 이름만의 본회의였기 때문에 아무런 순서

41) 위의 책, 56-57쪽.

42) 위의 책, 60쪽.

도 밟지 않고 담소 중에 결의 및 결정 사항에 위원의 조인을 마치고 회의를 종결하였다.⁴³⁾

자세한 경과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 과정에서 중국은 일본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신의 제안을 수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회 종료 이후 국민당 상해특별시당부의 선전부장의 성명에 따르면 중국이 제안한 만몽침략에 관한 조항이 “일본의 대지(對支) 정책은 지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까닭에 만몽에 대한 일본의 정책은 모름지기 개혁을 가해야 할 것이고 일본도 이를 승인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⁴⁴⁾ 이에 따라 후술하듯이 아시아민족대회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⁴⁵⁾ 그것의 존립근거를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어쨌든 본 회의에서는 연맹의 이사를 제1차 대회의 8 명에서 25 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결정하였으며,⁴⁶⁾ 다음의 제3차 회의는 1928년 11월 1일부터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열기로 하였다. 그러나 3회 대회를 개최한다는 산발적 보도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⁴⁷⁾ 이 대회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주도한 민간 차원의 단체나 회의는 1934년의 아세아민족대회를 제외하고는⁴⁸⁾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1934년의 이 회의에서 나타났던 국가 주도

43) 위의 책, 62쪽.

44) 그것이 완전히 일본의 이익을 대표하여 결정된 결의라는 점에서 “아시아민족회의라는 일막의滑稽劇은 이미 종말을 고했다”고 적었다. 위의 책, 75쪽 참조.

45) 이러한 중국의 반응에 대하여 일본 대표는 폐회식에서 “일본국민은 침략정책을 단연코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을 “침략주의로 이해하는 것은 일본 국민의 신념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위의 책, 74쪽.

46) 일본은 北條大洋, 大川周明을 비롯한 9명이었으며, 중국은 황공소, 吳山을 비롯한 8명, 인도 2명, 필리핀 1명, 아프가니스탄 3명, 조선 1명, 베트남 1명이었다.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구색 맞추기의 성격이 강했는데, 조선 이사는 제1회 대회 때의 李東雨였다. 위의 책, 61~62쪽 참조.

47) 3차 대회 개최를 준비하기 위하여 전아시아협회에서 北條大洋 2회 대회에서 일본 쪽 이사 9명 중 1인), 中屋, 美作 등의 3사람을 대표로 선출하고 아울러 3차 대회를 대련에서 열기로 하였다는 기사는 보이지만, 이후의 경과는 찾아 볼 수 없다. 동아일보 1928년 9월 22일자 및 水野直樹, 앞의 글, 515쪽 참조.

48) “우리들의 아시아는 우리들의 아시아 민족의 손으로”라는 구호 아래 1934년 2월 11일 대련에서 준비위원회를 열었는데, 일본과 만주, 중국, 몽고, 인도, 아프간, 삼, 베트남, 말레이, 터키, 페르시아, 이집트 등이 참가하였다. 동아일보(1934년 2월 13일자)는 9개국 46명의 대표가 출석하였다고 하고, 오미우리신문(1934년 2월 6일 및 12일자)은 50~60명으로 보도하였다. 세계종교 대동회

의한 위로부터의 조직으로서의 성격은 1943년 11월의 대동아회의에서 정점을 이루었지만, 거기에서 민간 시민 사회 차원의 주도권과 자발성을 찾을 수는 없었다.

IV. 조선인의 참가와 국내에서의 반응

제1회 아시아민족대회에 조선인이 참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처음에는 부정적 의견이 강했다. 그러나 일본의 ‘영토’인 조선 대표의 참가를 부정하면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 등의 대표도 참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⁴⁹⁾ 결국 일본 쪽 주최자는 도쿄 조선국민협회의 이동우(李東雨) 등 친일적인 조선인을 대표로 선발하

만주국협회, 동아산업협회, 조선대아세아협회, 진무카이(神武會), 오사카생산당지부, 흑룡회, 동방문화연맹 등 민간의 40여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고는 하지만 만주국의 日本系 간부 다수가 방청자로 참가하는 등 관변적 성격이 강했다.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만주국의 대표인 龍觀登이 맡았지만, 실제로는 오가와 슈메이의 동생으로 러시아문제전문가인 오가와 슈조(大川周三)와 만주국에서 오족협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나가오 군타(長尾郡太) 등이 주도하였으며 재정지원은 만철이 하였다. 대회의 선언으로는 1. 전아시아민족의 개방과 행복을 위하여 몸을 바쳐 매진함으로써 민족 상극을 청산하고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 2. 전아시아 민족의 단결을 도모하며, 3. 착취 없는 아시아를 건설하자는 3개 항을 채택하였다(요미우리신문, 1934년 2월 13일자). 준비위원회 개최를 즈음하여 대련의 영국과 미국, 독일, 소련 등 구미 각국의 영사관에서 “이 운동의 발흥 경과 참가 각 국민의 동정을 조사하는 한편 그 추이에 심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보도에서 보듯이(동아일보 1934년 1월 30일 및 2월 11일자, 요미우리신문, 1934년 2월 1일자), 이 대회는 1932년 국제연맹의 리튼조사단에 대한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만주국의 존재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의 단결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직되었다. 1934년 가을 대련에서 개최된 본 대회에는 아시아 각 민족/국가에서 100여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우익단체의 대표들이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A. M. Nair, 앞의 책 제2장의 언급을 제외하고는 본 대회에 대한 신문 보도는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윤치호(『윤치호일기』 1933년 7월 5일자)는 이 대회가 적어도 그 전해인 1932년 무렵부터 일본 군부에 의해 구상되어 왔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조선대아세아협회의 상담역으로 이 대회의 결성을 주도한 예종석이 자신에게 대회의 참가를 제안해 왔다고 한다(일기에서는 아세아협회로 표기되어 있다). 그에 대하여 윤치호는 “이런 단체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인들이 이런 단체를 결성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말하며 비아냥거릴 겁니다 자기 나라도 경영하지 못하는 주체에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경영을 주장할 자격이나 있냐고 말이죠”고 쓰아주었다고 한다. 김상태 편역, 『윤치호 일기 1916~1943: 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통해 본 식민지 시기』 (역사비평사, 2001), 315 쪽

49) 水野直樹, 앞의 글, 512쪽.

였다. 이에 대하여 『동경일일신문』은 “중국대표는 강경하게 21 개조의 철폐를 주장”한 것과 대조적으로 “다행히 조선의 대표는 국민협회와 같은 온건파만이 출석이 허용되어 극좌파는 회의 바깥에서 반대의 소리를 높일 따름이었”다고 보도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극좌파 운운은 아마도 회의에 참가를 요구하는 조선인이 회장에 나타나서 일본 쪽 주최자와 승강이를 하면서 조선독립을 주장하였던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짐작된다.⁵⁰⁾

사실을 말하면 이 대회 of 개최 사실이나 목적 등은 애초에 식민지 사회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일본인 주최 측에서 조선인의 참가 자체를 꺼려했던 만큼 친일 성향의 인사들이 대표로 참가한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예상되는 반발을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상태에서 대회의 본회의가 개최되기 이전인 7월 하순 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의 신문들은 이 대회에 대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한편으로는 이 회의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에 의구심과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던 것이다.⁵¹⁾

회의에 대한 조선인의 적극적 태도와 관련하여 조선총독부 경무국 문서는 조선 일보의 안재홍, 동아일보의 송진우 등은 아시아민족회의에 대한 입장을 협의하고 “조선민족의 대표자를 아무쪼록 출석시켜 이 기회에 조선민족의 불평을 호소하고자 의견의 일치를 본 것 같은데, 특히 동아일보의 송진우 일파는 이 의미에서 참가를 열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⁵²⁾ 조선의 신문들은 약소민족에 대한 대등한 지위의 보장과 아시아 내부 분쟁 원인의 근본적 해결을 아시아민족회의에 요구하는 한편, 아시아회의인 이상 중국과 일본만이 아니라 인도, 페르시아, 터키 등⁵³⁾

50) 위의 글, 514쪽 및 522쪽

51) 비슷한 맥락에서 동아일보의 논평(RYS생, 「아주대회 검토(1)」, 1926년 8월 3일자)도 대회에 대한 조선인의 이중적인 심정을 지적하였다. 즉 한편으로는 “인도, 터키, 暹羅, 마레, 중국, 비올빈 등지에서 무려 수백의 대표가 동회의에 참석한다고 하여 [...] 점차 국제회의적 성질을 갖게 되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대회에 참가를 거부하는 민족에게는 일종의 恍惚과 欲訴難訴의 鬱奮한 감을 가지게”하였다는 것이다

52) 이 자료는 특히 동아일보 간부가 회의 참가를 강하게 바라고 있다고 한 것과 대조적으로 水野直樹는 사실에서 보는 한 동아일보보다도 조선일보가 조선대표의 회의 참가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朝保秘 第742号 1926년 7월 27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全亞細亞民族會議ニ關スル件」(第2報)(水野直樹, 앞의 글, 547쪽의 주31 참조).

53) 水野直樹, 위의 글, 525쪽.

과 아울러 조선인도 당연히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아일보는 사실을 통하여 아시아민족회의 자체에 대한 기대를 다음과 같이 표명하면서, 그에 대한 일제의 억압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일본의 일부 정객들이 미국의 배일법을 반항하는 의미로 이 회의를 力圖하는 것도 가리지 못할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회의를 처음부터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아세아인을 배척하는 것은 일본에서 조선인 노동자 입국을 제지하려고 하는 것이나 동일한 非理이니 오인은 그에 대항하는 데에 이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美妙한 기치를 내세우고 회의를 구성시키는 절차를 보면 그 표방과는 부합하지 아니한 것이 명료한 고로 그에 반대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정부가 아니라 민간 유지가 모여서 ‘공동과 정의’, ‘자유와 평등’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데에 무슨 반대가 있을 것이 있으리라는 그러한 미명하에 아세아민족대회를 개최한다고 표방은 하면서 조선민족 즉 아세아의 평화와는 절대로 분리하여 생각하지 못할 조선민족에게 대하여는 주최자의 지위에 있는 일본 경찰이 그 회의에 관하여 의견 교환할 기회까지 금지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표시하는 행동인가.⁵⁴⁾

동아일보와 대조적으로 조선일보는 대회 자체에 별다른 기대감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일본인 주최자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만약 인도에서 그에 참가하게 된다면 우리 조선서도 그에 참가할 수 있을 터인데 조선에 대하여 참가를 권유함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으니 매우 기괴한 일이라 하겠다. 그들이 만일 아세아국제연맹을 조직한다면 별문제이겠지마는 ‘민족’을 단위로 하는 이상에는 조선민족을 제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 회의 자체에 대하여 촉망함이 없음으로써 참가·불참가를 문제로 할 필요는 없겠지마는 그들이 조선민족에 대하여 초청장을 발(發)하지 아니한 것은 그 주최자의 심사가 극히 비열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시아민족대회에 대하여 항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없다.⁵⁵⁾

54) 「소위 아세아민족회의 - 조선경찰의 금지를 보고」, 동아일보 1926년 7월 21일자 사설

이와 같이 조선의 신문들은 입장에 따른 차이는 어느 정도 있었다 하더라도 조선인의 대회 참가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보면서 점차 실망과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아시아민족회의는“自家의 聲勢를 돕고자 하는 정략적 동기에서 나온 일본의 지도에 의한 것”이며 “강대한 백인국(즉 미국·필자)에 대한 일본의 정략적 일회극 에 조선인이 참가하더라도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⁵⁶⁾

다른 한편으로 조선의 각 사회단체들은⁵⁷⁾ 나가사키에서 준비회의가 열리고 있었던 7월 중순 무렵부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7월 18일에 전진회는 집행위원회를 열어 아시아민족대회는 “주최단체와 소집의 근본적 의미로 볼 때 아시아 또는 세계적으로 피압박 민족의 해방운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반대의 태도를 취”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아시아 각 나라에 있는 각 무산운동단체 및 민족운동단체와 협동해서 나아갈 것과 아울러 피압박민족의 단결을 한층 도모하는 의미에서 아시아 피압박 민족대회를 적당한 시기에 개최할 것을 제창할 것”을 결의하였다.⁵⁸⁾ 이어서 경성청년회 역시 다음날인 19일에 긴급위원회를 열어 이 대회를 “제국주의적 착취계급의 국제적 회합”이자 “약소민족을 가일층 진보된 수단정책으로 교묘히 착취하려고 하는 연합회의”로 정의하고 “근본적으로 이를 부인함과 동시에 반대”하기로 결의하였다

같은 날인 19일 서울에 있는 30 여개의 시민 단체⁵⁹⁾는 이 문제에 대한 연합토론

55) 「아세아민족대회」, 조선일보 1926년 7월 13일자 사설

56) 「아세아민족회의와 조선인」, 조선일보 1926년 7월 20일자 사설 참조 아시아민족회의에 대한 조선인의 입장은 백인의 압박을 받고 있는 민족이나 중국인과는 다르다는 논지는 바로 직전의 7월 16일자 사설(「다시 아세아민족대회를 논함」)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사설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조선의 사례를, 백인의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친일적 경향이 있는 필리핀이나 인도의 사례나 백인과 아울러 일본의 압박을 받는다는 점에서 의연히 반제국주의적 기운이 강한 중국의 사례와 구분하여 볼 것을 주장하였다.

57) 당시 사회운동에서 양대 세력을 구성하였던 화요파와 서울계의 대립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에 대한 반대는 주로 후자의 계열에 집중되어 있다. 즉 서울청년회나 전진회 등이 대회에 반대하는 결의를 주도하였다.

58) 조선일보 및 중외일보, 1926년 7월 20일자 정진석 편 『일제시대 민족지 압수기사모음』(LG 상남 언론재단, 1998), 367~368쪽. 아시아피압박민족대회와 비슷한 구상은 다음 날 열린 청년총동맹의 상무위원회에서도 아시아민족대회에 대한 대항책으로 아세아약소민족총연맹을 제창하자는 형태로 제안되었다.

회를 개최하여 1) 아세아 민족회의에 참가 여부, 2) 참가하는 경우에는 대표의 선출 및 그 파송 방법 여하, 3) 참가치 아니할 경우에 이 회의에 대하여 조선인의 태도를 해명할 필요의 여부, 4) 민족대표를 참칭하고 동 회의에 참석하여 대중의 의사와 배치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취할 태도 등을 토의코자 하였으나 종로경찰서에서 집회 금지를 하고 말았다.⁶⁰⁾

이러한 상태에서 이 대회에 대한 중국 국민당과 학생연합회의 반대 성명의 내용과 아울러 중국 재류(在留) 동포도 협동하여 반대한다는 기사가 보도되는 한편⁶¹⁾ 조선대표로 참가하게 될 인물들이 친일 경향 일색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⁶²⁾ 아시아민족회의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이리하여 각 사회단체들은 경찰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서회의를 열어 27일 오후 대회에 반대하는 아래와 같은 결의문 전문을 각 민족대표에게 타전하였다.⁶³⁾

- 59) 주요 참가 단체는 노총과 청총, 여성동우회와 같은 사회운동 단체들과 천도교, 대중교, 불교청년회 등의 종교 단체, 그리고 개벽사, 시대, 조선, 동아일보 등의 언론 기관과 아울러 형평사, 여성동우회, 혁명당, 경성여자청년회, 노동당, 서울청년회, 교육회, 여자교육회 등이었다. 동아일보 1926년 7월 21일자 참조.
- 60) 7월 23일에는 광주에서도 신우회 주최로 광주청년회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연합토론회를 개최하여 대회에 반대하고자 하였으나 역시 경찰에 의해 금지되었다. 동아일보 1926년 7월 26일자.
- 61) 국민당과 아울러 상해 학생연합회가 대회에 대하여 “일본이 아세아의 패자가 되려는 야심 하에 개최되는 것으로 일본의 침략 정책에 대한 중국의 반대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회의의 개최는 곧 일본 제국주의의 실행이면서 동시에 아세아 민족을 일본에 예속시키는 발단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동아일보 1926년 7월 25일자 참조.
- 62) 대회 주최자인 아세아협회 今里準太郎에게 조선 민족대표가 누구인지를 전보로 문의한 결과 李起東, 朴春琴, 洪俊杓, 李東雨, 李範昇(나중에 알려짐)의 5명을 추천하였다는 아세아협회의 회답을 받았다. 동아일보 1926년 7월 26일자 참조. 이들 모두는 전형적인 친일 인물들로, 이기동과 박춘금은 일본에서 유명한 친일 노동단체로 제일조선인의 노동조합과 대립되었던 상해회의 중심 인물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테러를 일삼았으며, 박춘금은 이를 기반으로 1930년대 일본 의회의 중의원으로 활동하였다(김대상, 『박춘금 강패에서 일본 국회의원까지 된 극렬 친일파』,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친일파 99인(2)』(돌베개, 1993), 57~65쪽 및 정운현, 『주먹으로 오른 ‘친일배의 정상’: 제일 친일파 거두 박춘금』, 『나는 황국신민이로소이다』(개마고원, 1999), 294~300쪽. 홍준표 역시 도쿄에서 조선 유학생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던 ‘직업적 친일분자’였다. 이동우는 국민협회 간부이자 중추원 의원으로 참정권 운동을 벌였다. 경성도서관의 설립과 민립대학설립기성회에 관여하였던 이범승은 총독부 관료와 양주경찰서장 등을 역임하였다.
- 63) 구체적으로는 중국대표 蔣均素, 인도대표 붓, 터키대표 툴만가리, 비올빈 대표, 섬라 대표, 몽고 대표, 아프가니스탄 대표, 일본대표 今里準太郎, 아세아민족대회의장 말레이 대표와 아울러 중국 상해의 *North China Daily News*와 일본 고베의 *Chronicle*의 두 신문에 타전하였다. 동아일보

오는 8월 1일 일본 장기에 개최되는 아세아민족대회에 대하여는 우리는 그 주최의 동기로 보든지 또 주최자의 인물로 보든지 항상 의구(疑懼)의 남(念)을 가지고 대하여 왔었던 바, 금번 소위 조선민족대표자의 결정을 봄에 이르러 아세아민족대회의 정체라는 것이 여하한 것을 확실히 알았다. 우리는 단언하노니 아세아민족대회라는 것은 아세아의 피압박 제민족을 xx(말살-필자)하려는 xx(일본-필자)의 제국주의적 야심의 산물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조선 2천 2백만 대중의 이름으로 8월 1일 장기에서 열리는 소위 아세아민족대회 그것을 부인하노라.⁶⁴⁾

나아가서 아시아민족대회에 대한 반대의 여론은 전국 각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7월 29일 마산에서는 마산 기자단을 비롯하여 청년연합회 등 15 단체가, 평남 안주에서는 8개 단체가, 그리고 대구에서는 14개 사회단체가 연합하여 “불순한 동기와 비겁한 술책으로 조선민족을 농락하는 아세아민족대회는 절대로 반대한다”는 결의를 채택하고 전보를 발송하였다.⁶⁵⁾

비록 7월 27일의 반대 결의문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조선의 신문들 역시 지면을 통해서 대회에 대한 반대 여론의 기세를 더하였다. 조선일보는 조선대표를 자칭하여 참가하려는 조선인을 ‘魚頭鬼面의 무리’, ‘[일선융화]의 모리배’라고 비난하였고,⁶⁶⁾ 동아일보는 7월 27일부터 29일의 3회에 걸친 사설을 통하여 아시아민족의 단결을 내세운 일본의 “천박한 기만술”을 비판하였으며,⁶⁷⁾ 이어서 대회가 끝난 8월 3일부터 6일까지 4차례에 걸쳐 대회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장문의 논평문을 게재하였다.⁶⁸⁾

1926년 7월 29일자 참조

- 64) 19일의 연합토론회에 참가한 단체와 비교해 볼 때 앞의 회의에 참가하였던 천도교, 대종교 등의 종교 단체와 개벽사, 시대, 조선, 동아일보 등의 언론 기관이 빠진 대신에 천도교에서는 천도교청년회와 천도교청년동맹 등의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이 새로이 참가하였다. 아울러 이전에는 참가하지 않았던 화요회 계열의 신흥청년동맹과 정우회 등과 아울러 조선물산장려회, 조선변호사협회 등의 민족주의 성향의 단체들이 새로이 참가한 것이 눈에 띈다. 동아일보 1926년 7월 29일자 참조
- 65) 동아일보 1926년 7월 31일자.
- 66) 「果然 參稱代表의 蠢動」, 조선일보 1926년 7월 26일 사설
- 67) 「아시아민족회의와 일인 胸量: 조선대표선거방법(상·중·하)」, 동아일보 1926년 7월 27-29일자 사설 참조
- 68) 이하의 내용은 RYS생, 「아주대회 검토(1~4)」, 동아일보 1926년 8월 3일 6일자 참조

이 논평문은 아시아민족대회가 출현한 이유로서 구러시아제국의 범슬라브주의, 독일의 범독일주의, 터어키의 범터어키론, 혹은 미국의 먼로주의 등과 같이 “부르주아지가 민족문제를 이용하는 사례”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강대국과의 경쟁을 위해 일정한 지리적·인종적 표어로 동맹군을 확보하려는 민족부르주아지의 시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1924년 미국의 배일법안에 촉발되어 일본제국의 부르주아지들이 제창한 아시아인의 대동단결은 얼핏 보기에 아시아인의 공존공영을 위한 당연한 주장인 듯하나 사실은 일본 부르주아지의 민족문제 이용의 국외적 발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를 위하여 유색인종과 백인종의 대항설을 유포시키면서 “일지친산”이나 “일선융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아시아에서 서세를 구축하고 아세아시장을 독점하려는 제국주의 정책의 발로로서, 인도나 필리핀, 페르샤 민족에게는 “상전의 명위가 변경된다는 말이고, 조선에 대해서는 일본제국의 덕분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이 논평은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민족대회는 약소민족의 해방을 위한 민족별 회합이라기보다는 “일 국가의 제국주의 정책으로의 민족적 회합”에 불과하며, 아시아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오직 제국주의적 자본열국 하에서 신음하는 각 약소민족 및 xxxxx(노동자계급 필자)이 완전히 해방되는 날에야 비로소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 약소민족은 “오직 각자의 해방과 진정한 평화를 도득(圖得)키 위한 약소민족의 단결로 이에 대항하는 동시에 자본제국 내의 xxxxx(노동자계급 - 필자)과 제휴하여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에 게을리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목할 것은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아시아민족대회에 반대하는 국내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에서 대회에 반대하는 동향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일보는 1926년 7월 29일자 「시평」에서 중국 국민당의 반대성명을 소개하면서 아시아민족회의는 결국 일본의 의사에 적합한 자만을 모은 회의라고 비판하였으며, 동아일보는 중국 상해에서 조선청년동맹을 중심으로 중국학생연합회가 단결하여 아세아약소민족동맹을 조직하고 아세아 민족회의가 열리는 당일에 대규모로 반대선전운동을 한다는 보도를 하였다.⁶⁹⁾

69) 동아일보 1926년 7월 31일자.

이와 같이 국내에서 강력한 반대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이범승은 대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70) 이동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참석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제1회 아시아민족대회에는 조선 대표로 이동우(李東雨)와 강세형(姜世馨)의 두 사람이 참석하였다. 대회의 실체가 명백해 짐에 따라 조선의 지식인들은 대회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대회에 대한 비판과 반대만이 남았다. 신문들도 회의가 열리고부터는 대회에 관한 사실은 게재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만이 7월 4일자 석간의 시평 「長崎의 소인극」에서 냉소적으로 비판하였을 따름이다. 회의에 대하여 논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 신문의 태도였던 것이다.71)

1927년 상해에서 열린 제2회 회의에는 조선대표로 1회 때 참석한 국민협회의 이동우가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병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연맹으로부터 안내장을 받았던 상해 거주 조선인은 “아시아 민족의 대표자들이 모여 민족해방을 위해 논의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72) 이번 회의에서 일본 대표는 모두 일본 정부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함께 논의할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73) 따라서 중국국민당과 마찬가지로 절대 출석하지 않을 의사를 보이고 만일

70) 동아일보 1926년 7월 29일자 참조

71) 水野直樹, 앞의 글, 532쪽.

72) 여기에서 보듯이 아시아를 하나의 단위로 서구에 대항하고자 하는 아시아주의적 발상에 대하여 한국이나 중국이 전혀 부정적이지는 않았다. 중국대표의 1사람인 石瑛 역시2 차 대회에서 이사 및 최고집행위원을 수락하였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자 이를 해명하는 서간에서 “아시아의 각 약소민족이 확실히 연합하여 함께 해방을 도모함은 거행(舉行)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회의의 요청에 응하였다고 술회하였다. 내무성 경보국, 제67호, 77쪽 참조

73) 그런데 중국 쪽에서 조선대표의 참가를 일본이 저지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혹시 참가하고자 했던 다른 조선인 그룹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上海各路商界總聯合會가 회의에 대한 비판 성명에서 약소민족회의를 표방하는 아시아민족회의가 조선대표의 참가를 저지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내무성 경보국, 제67호, 73쪽). 이 문제는 다른 곳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현대평론』에 기고한 글에서 燕召亭은 “이번의 아세아민족대동맹에서는 일본대표가 반대하였기 때문에 고려 대표가 이 대동맹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민족대동맹의 의의를 없게 하고 말았다. 이 점에서 목전의 형세에 관하여 말하면 이미 이 아세아민족대동맹은 일본의 아세아민족대동맹이고 적어도 일본이 조중하는 아세아민족대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은 백인종의 멸시를 받아 대아주주의를 제창하고 있지만 중국을 침략하고 고려를 압박하고 오히려 소일본민족주의를 실행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燕召亭, 「亞細亞民族大同盟」, 『현대평론』 제6권 제156기, 1927년 12월 3일, 水野直樹, 앞의 글, 538~539쪽에서 재인용. 후자의 글에서 조

출석한 자 있으면 이를 살해해야 한다는 결의를 하였다고 한다.⁷⁴⁾

이밖에 대표 명단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중국 대표의 일원으로 참가한 조선인으로는 권기위(權旣爲)와 권희국(權熙熙國)의 두 사람이 있었다. 권기위에 대하여는 “중국인이라고 자칭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시찰선인으로 [...] 노농 밀정의 혐의가 있다”는 자료의 언급으로 미루어 사회주의 계열의 인물로 추정된다. 대회에서 그의 역할은 주로 통역을 맡았는데, 위의 자료는 “연맹에 대하여 아무런 주의 정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보를 얻기 위하여 중국에 국적을 가졌다고 하여 교묘히 중국 측에 들어가 대표로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⁷⁵⁾ 권희국은 1920년대 초반 일본 도쿄에서 코스모구락부⁷⁶⁾에 참여하였던 인물이다. 그는 때때로 도쿄에서도 중국인으로 행세하면서 활동하였는가 하면 1920년대 중반에는 그의 의부(義父)와 함께 도쿄와 조선의 정계에서 만주에 조선인자치지대를 설치하기 위한 운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일제에 반대하기는커녕 협력”하였다는 평가도 있다.⁷⁷⁾

이 대회에 대한 조선에서의 반응은 제1회 대회가 개최되었던 전년과 달랐다. 이미 대회의 성격이 명확해진 이상 그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신문들도 회의의 경과를 전하는 짤막한 기사 이외에 더 이상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제1회 대회와는 달리 제2회 대회에 대해서는 간략한 보도 기사 정도에 그쳐 사실 등의 논평도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던 일본 언론의 추세⁷⁸⁾와 일

선은 ‘고려’로 일컬어지고 있다

74) 내무성 경보국, 제67호, 67쪽. 상해 거주 대만인 역시 이와 비슷한 입장을 표명하였던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상해 거주 대만인의 다수는 그에 무관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대표적 인 대만인 사상단체인 상해대만학생연합회는 대만 민중은 대회 참가 안내를 거절한다는 취지의 불참 성명을 중국어 신문에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아시아민족동맹에 대만대표로 郭國基가 출석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 동맹의 가면이 이미 탄로된 이상 대만민족은 대표를 파견하여 참가하는 것을 단연코 거부한다는 것이다. 같은 책, 67~68쪽 참조

75) 위의 책, 44쪽, 64~65쪽 및 67쪽 참조

76)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이 단체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 피압박민족주의자들이 참여하여 “국민적 증오, 인종적 편견을 버리고 互助友愛의 생활을 지향하는” 인류애적 결합”을 목표로 1920년 11월 도쿄에서 결성되어 1923년 무렵까지 활동하였다. 이 단체의 창립대회에서 그는 개회사를 하였다. 松尾尊允, 「코스모俱樂部小史」, 『京都橋女子大學研究紀要』 第26号(1999), 34~35쪽 참조

77) 그에 대한 자세한 이력은 松尾尊允, 위의 글, 24~25쪽 및 56~57쪽의 주11 참조

치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동아일보만이 유일하게 사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대회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아세아민족대회라는 자가 진정한 아세아민족해방운동의 선구자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범아시아주의의 취미(臭味)가 농후하여 모국(某國, 즉 일본 필자) 제국주의의 주구에 불과하다는 것은 진정한 해방운동자들의 일치한 관찰이다. [...] 아시아인이라 황인종이라 하는 동류의식은 사실의 앞에서 깨어졌다. 아세아는 이분되었다. 아세아의 제국주의자와 그에 찬동하는 세력은 한 편에 진을 치고 있다. 모든 약소민족과 진정한 해방운동자는 또 한편으로 진을 치려고 한다.⁷⁹⁾

국내에서의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열렸던 중국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조선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이 회의에서 모든 불평등조약과 규칙 및 아시아민족에 대한 모든 가례(苛例)를 폐지하지는 안을 제출하고 인도와 조선, 베트남, 필리핀, 페르샤 등 피압박민족의 해방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일본은 전아시아 약소민족의 현상타파에 노력함과 동시에 조선, 대만 문제에 관하여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⁸⁰⁾ 쟁점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그런가하면 중국국민당 기관지 『민국일보』는 제1회 회의 이래 “일본의 중국에 대한 침략, 한국에 대한 학대”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⁸¹⁾ “지금 한국 민중은 이미 이 허방다리와 같은 아세아민족대회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대를 성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음을 합하여 함께 노력하고 전이주의 각 피압박민족 - 인도, 조선, 안남과 같이 가장 친애로운 민족 - 과 함께 실제로 우선 단결을 표시하고 상호원조를 실행”하여 “어용기관의 아세아민족

78) 水野直樹, 앞의 글, 516쪽.

79) 「소위아세아민족대회」, 동아일보 1927년 11월 5일자 이 사실은 아시아주의에 대하여 불명확하고 모순적인 인식을 보인다. 한편으로 이 대회가 아시아주의에 입각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아시아나 황인종이라는 동류의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80) 내무성 경보국, 앞의 책, 57-58쪽.

81) 이밖에 중국신문으로는 『新聞報』(1927년 10월 31일자)가 간단한 소개를, 『時事新報』(11월 7일자)가 간략한 논평문을 게재하는데 그쳤다. 내무성 경보국, 위의 책, 68쪽 참조.

대회를 개조”하지는 것이었다.⁸²⁾

민국일보가 언급했던 조선 민중의 아시아민중대회에 대한 단호한 반대는 유감스럽게도 제2회 대회 당시가 아닌 그 전해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 신문의 성명과는 달리 당시 조선에서는 대회와 관련한 논의조차 아예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던 것이다.⁸³⁾ 그러나 조선과 중국의 이러한 대조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실만은 자명한 것으로 보였다. 즉 서구에 대한 아시아인의 단결이나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의 공존공영에서 일본이 주도권을 발휘할 여지는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일본에 대한 불신과 아시아의 분열은 당시 일본의 신문이 자명한 전제로 한 ‘아시아 공통의 감정’과⁸⁴⁾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다.

V. 동아시아와 태평양 국가들의 반응

아시아민족대회에 대해서 일본의 언론이 보도와 논평을 한 것은 제1회 회의에 대해서 뿐이다. 이들 대부분은 구미의 백인종과 아시아 민족을 대조시키면서, 아시아에서 유일한 문명국가로서의 일본의 위치를 강조한다. 서구에 대한 아시아의 부흥과 아시아민족의 단결을 주장하면서 여기에서 일본이 지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구미제국과 견줄 수 있는 나라는 일본뿐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⁸⁵⁾

제1회 아시아민족대회에 대한 일본 국내의 여론을 검토한 미즈노는 회의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고 소극적 차원에 머물렀다고 평가하였다. 회의의 경과에서 보아 크나큰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다룬 사실 자체가 적었다는 것이다.⁸⁶⁾ 그러나 제1회 대회에서 일본이 별다

82) 인용문에서 보듯이 중국은 조선을 ‘한국’으로 일컫고 있다 張源鵬 「아세아민족대회에 반대한다」 민국일보, 1927년 11월 4일자. 水野直樹 앞의 글, 542쪽 및 내무성 경보국, 위의 책, 68쪽 참조

83) 굳이 들자면 같은 해인 1927년 7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제2회 태평양회의와 태평양문제연구회에 대한 비판의 여론은 있었다. 김경일 앞글 참조

84) 水野直樹, 앞의 글, 533쪽 참조

85) 위의 글, 517~519쪽.

86) 위의 글, 520쪽

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제2장에서 보았듯이 일본은 이 대회에서 자신들이 원하던 당면 현안과 미래 사업들에 대한 제안을 공동 결의의 형태로 통과시켰으며, 중국 대표단은 이러한 일본의 독주에 불만을 품고 다음 대회를 기약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제1회 대회가 일본의 의도대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러시아의 신문에 의해서도 지적되었다(후술). 아시아주의의 입장에서 회의의 의의는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고 하는 당시 일본 언론의 논조의 기저에는 다분히 국가중심의 사고가 있다.

회의에 대한 일본 언론의 천편일률적인 보도와는 달리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약소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대회를 비판한 신문도 있었다. 이에 따르면 아시아민족회의는 ‘태평의 심심과적의 놀음’, ‘유한계급의 쓸데없는 모임’에 불과한 것으로, 참가자는 “정의인도, 공존공영이 모토 같은데 아름다운 꿈을 탐하는 무사상, 무비판, 現實人生 無痛感의 무리”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들은 “강대국의 정의·인도는 주장·관철하여도 약소국의 그것은 목살되는 국제현세의 비통한 사실을 음미하고 있지 않다”는 혹평을 받았던 것이다.⁸⁷⁾

다음에 조선이나 중국에서 회의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일본의 여론은 1~2신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관매일신문』과 같이 조선과 중국에서 회의에 반대하는 운동이 있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그것을 “괴팍한 독단적 반대론”으로 해석하고 있다. 『동경일일신문』은 조선인이나 중국인으로부터 반대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점에서 어느 정도 진전된 태도를 보였지만, 이 사실에서도 조선인이나 중국인으로부터의 비판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찾기는 어려웠다.⁸⁸⁾

중국의 경우를 보면 나가사키에서 열린 제1회 대회에 대한 일반의 여론은 매우 냉담하고 부정적이었다. 즉 대회에 대하여 “중국 사회 각 방면에서는 일본인 측의 일종의 이용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하여 도외시”하였을 뿐 아니라 불평등조약의 철폐 등 중국의 요구 또한 “경험에 의하여 통과될 희망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곳에서 통과된다 하여도 실현 가망이 없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이다.⁸⁹⁾

87) 蒲生成丸, 「アジア民族會議寸評」, 『日本及日本人』, 제106호(1926년 9월)(水野直樹 위의 글 523쪽에서 재인용).

88) 각각 水野直樹, 위의 글, 519쪽 및 522쪽 참조.

이에 따라 商界연합회나 학생회 등의 시민 단체는 물론이고 상해특별시 국민당 당부도 다음과 같은 선언서를 통해 대회를 반대하였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전술했듯이 제2회 대회로 이어졌던 것이다

일본제국주의자가 구두 친선으로써 아주에서 그 침해정책을 실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유구를 차지하고 조선을 병합한 것이 그 어느 것이 아주의 稱覇하는 것이 아닌 것이 없고 인도와 비올빈과 아프간에 대하여 표면적 호감을 보이는 것은 역시 약소민족을 교사하여 타인의 기반에서 탈리케 한 뒤에 어부지리를 취하자는 것이니 이것도 또한 진정한 친선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일본제국주의자가 홀연히 아주 민족의 친교를 증진시키느니, 문화, 정치, 재정, 상무에 관한 것을 토의하느니 하여 [...] 형식적 회의를 소집(하는 이유는-필자) [...] 근래 아세아 각 약소민족이 반항운동이 거역 맹렬하여 짐을 따라 일본제국주의자가 이미 동요되기 시작함으로 그 회유의 정책을 실행하여 약소민족을 騙欺하고 반항운동으로 완화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 [...] 우리 중국인은 중국의 민족의 해방과 자유 독립을 위하여 맹세코 일치 반대하여 일본제국주의들이 소집하는 아세아민족대회에는 절대로 참가치 아니한다.⁹⁰⁾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신문들은 아세아민족대회가 아시아의 공동선을 표방하는 아시아주의에 입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이익만을 위한 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에 반대하였다. 예를 들면 『上海商報』는 대회의 주최 단체인 동경의 전아세아협회와 북경의 아세아민족대동맹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대아시아주의를 고취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라는 점에서 실제 회의는 일본제국주의가 소집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어서 이 신문은 일본은 “정치를 말하지 않는다”는 언사로써 불평등조약 폐지의 요구를 말살하고 따로 ‘경제제후’라는 미명을 고창하지만 그것은 아시아의 시장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일본이 중국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경제침략의 시도라고 주장하였다.⁹¹⁾

89) 동아일보 1926년 7월 17일자.

90) 동아일보 상해특과원 趙德津이 개요를 소개한 것이다. 1926년 8월 2일자 참조

91) 「전아세아민족대회의 인식」, 『上海商報』 1926년 7월 27일자(水野直樹 앞의 글 534 쪽에서 재인

국민당 기관지이면서도 좌파색이 강한 『廣州民國日報』는 아시아 각 민족의 공통의 이익을 도모하는 회의는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각 민족이 독립·자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이 아시아의 많은 민족을 압박하여 왔다는 점에서 이 회의가 일본의 이익을 위하여 소집된 것은 일본이 제출한 아시아횡단철도 등의 제안을 보더라도 명확하다고 하면서 일본이 회의를 통하여 얻는 이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일본의 아세아주의가 각 민족으로부터 승인되고 있는 것을 제국주의 열강에 보일 수 있고, 나아가서 이를 통하여 대아시아주의의 확립을 요구할 수 있다.
2. 각 민족을 농락하고 무의식중에 이들을 일본의 대아시아주의의 手下로 만들 수 있다.
3. 중국 몽고 및 소련의 반제운동에 대하여 외견상 반제처럼 보이는 회의를 소집함으로써 민중의 반제 목표를 이전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대한 반감을 줄이고 반제운동이 어느 사이엔가 커다란 정돈(停頓)을 하게 마는 것을 바랄 수 있다.⁹²⁾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嚮導』 역시 이 회의는 다른 어느 아시아 민족보다도 중국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일본이 제창한 대아시아주의의 표현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것은 일본제국주의의 아시아민족에 대한 僞瞞策으로 회의에서 일본이 제출한 아시아은행, 아세아철도 등은 전아시아의 경제적 명맥을 지배하려고 하는 일본제국주의 침략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였다.⁹³⁾ 좌우를 막론하고 중국의 신문들은 아시아민족회의와 그것을 뒷받침한 아시아주의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보였던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구미

용).

- 92) 啓修, 「소위 아세아민족회의는 마각을 노정하였다, 『廣州民國日報』 1926년 8월 17일자 水野直樹(위의 글, 536쪽)인 이 사설의 논조가 북벌 개시 직후의 광주에서 국민혁명 반제국주의의 기운의 고양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93) 超麟이 『嚮導』에 기고한 글들로 「亞細亞民族大會」, 第165期, 1926년 7월 28일 및 「亞細亞民族大會之結果」, 第166期, 1926년 8월 6일자 참조 水野直樹, 위의 글, 537쪽에서 재인용.

제국의 신문들 역시 대회에 대한 경계와 회의를 표명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예를 들면 미국의 한 신문은 사실에서 “대회의 주요 목적은 불만 약소민족의 대표자에 백인 우월에 대한 혁명적 사상을 자극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이 대회가 “태평양에서 평화 확보의 장래가 영미 양국의 협조에 있다고 자각하는 일본의 이익으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⁹⁴⁾ 동아일보는 “아주민족대회 미국은 도외사”라는 표제로, 미국정부 내에서는 “회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또 과연 이 회의가 외견상 예상되는 대로 중국인·인도인 및 세력이 없는 일본인 등의 과격분자만의 회합이 아닌가 하여”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대회가 “그렇게 크나큰 의의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관측”하고 있다고 미국의 동정을 전하고 있다.⁹⁵⁾

미국에서의 언론이 보다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경계와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짐짓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과 대조적으로 러시아의 신문들은 이 대회에서 일본의 의도와 목표를 보다 풍자적이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러시아의 한 신문은 “일본의 제국주의는 이빨을 드러내어 자기의 식욕을 과시하였다. 물론 아시아의 문화, 문명이라든가 기타 그럴싸한 연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회의의 주최자인 대제국주의 제안자의 진실은 은폐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대회의 경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제1회 대회에서 일찍이 혼란이 조성되었다 중국대표는 외교적 권모술책이 아니라 솔직하게 자신이 가장 불쾌하게 여긴 바이고, 일본이 전혀 예기하지 않은 바의 21개조의 철폐 문제를 제출한 것이다. 일본의 주최자 측에서는 회의를 크게 예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구미의 백색제국주의자를 비방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위치를 차지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들은 자신의 권리나 특권은 하나라도 양보하지 않았다.⁹⁶⁾

하얼빈에서 발행하는 다른 신문은 회의에 참가한 제국주의 일본의 진의는 “백

94) “Again the “Pan-Asia” Bogy,” *New York Times*, July 17(1926), 또한 水野直樹 위의 글 512 쪽 참조.

95) 동아일보 1926년 8월 3일자.

96) 이 신문은 “결국 전아시아민족회의는 비망으로 시작해서 비망으로 끝난 감이 있다”고 대회를 총평하였다. 『에에호』, 1926년 8월 4일자, 내무성 경보국 제50호 109~110 쪽 참조.

색인종의 황색인종에 대한 속박을 일본의 그것으로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일찍이 미국은 구주대전에 편승하여 大金으로 전유럽을 굴복시켰는데 일본은 이제 美言을 농하여 조선을 병탄한 수단으로 중국 영토의 일부를 빼앗고 시장을 약탈”하려고 한다고 비난하였다⁹⁷⁾ 그런가하면 또 다른 신문은 아시아민족 회의에서 일본이 말하는 아시아민족의 평등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압박하였다는 점에서 “평등이 아니고 실로 전황”이라고 하면서 “결국 회의는 전 대표자의 일치 조인을 보기에 이르렀지만 결국 이 회의에서 어부지리를 점한 것은 일본뿐이다”고 평가하였다.⁹⁸⁾

다음에 1927년 상해에서 열린 제2회 대회에 관해서는 상해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은 물론이고 중국어신문 등은 대체로 보아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다. 단지 일본어신문만이 상세하게 회의의 경과를 보도하고 내용을 충실히 전달했을 따름이다. 예를 들면 영국계의 한 영자신문은 사실에서 “회의의 목적은 물론 이를 세계에 과대하게 보도하고 선전하는데 있다 하더라도 모인 사람은 불과 일본, 중국, 인도, 아라비아, 터키, 아프가니스탄에 지나지 않고, 필리핀, 조선, 삼, 서시베리아, 西藏, 자바 등은 1명의 대표자도 보내지 않음은 계획자의 의도가 아닌가”라고 비판하였다. 미국계의 다른 영자신문은 “인종적 편견을 조장하려는 혐의가 있음을 면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바 없으면 모처럼의 회의도 국제 기아로 되어 幼死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논평하였다.⁹⁹⁾

이 대회에 대한 중국 국민당과 상해특별시당부의 냉담한 반응은 이미 제2장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 있었다. 예컨대 상해특별시당부는 회의에 대한 반대 선언에서 아시아 차원의 회의가 아시아민족들의 환영을 받기 위해서는 회의의 목적이 제국주의 타도에 집중해야 하며, “야심을 품는 국가의 조종”이 아니라 아시아 약소민족들이 자발적으로 공동 조직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 아시아대동맹이라는 것은 표면상 민족회의의 미명을 내걸어도 실제로는 오

97) 『노보스타나 지즈니』 1926년 8월 4일자, 내무성 경보국 위의 책 110 쪽 참조

98) 『카페이카』지, 위의 책 111 쪽 참조 이미 언급했듯이 중국 역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이 대회가 일본의 의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았으며, 이는 일본 국내에서 대회에 대한 소극적 평가와는 대조를 이룬다.

99) 전자는 *North China Daily News*, 11월 5일자, 후자는 『大陸報』, 11월 7일자 내무성 경보국 제 67호, 69 쪽 참조

히려 일본 제국주의자를 원조하여 은밀히 침략을 행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것이다.¹⁰⁰⁾ 상해대회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상해를 중심으로 한 학생회와 교육회, 노동단체 등의 시민 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중국인의 경우도 이 회의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회의의 진행을 반기지 않았다”¹⁰¹⁾

특히 상해 대회에서는 자칭 중국 대표로 참석한 인물들의 대표성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국민당 상해특별시당부의 성명은 “이 회의의 출석대표는 단지 4, 5 국가뿐이고 더구나 이들 대표가 그 민족의 대표일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중국대표로 자칭하는 황공소는 중앙당부의 위임을 받지 않고 또 국내 法團의 共同推選을 거치지 않았다. 우리들은 실제로 그가 과연 무엇을 대표하는가를 알지 못한다”고 대표 자격을 강하게 비판하였다.¹⁰²⁾ 上海各路商界總聯合會 역시 중국 대표의 자격문제를 제기하였다. 회의에 대한 비판문에서 이 단체는 아시아민족회의의 “대표는 어디에서 산출되는가? 또 어떠한 자격에 근거하는가? 국민 정부로부터 위임되는가 아니면 민중에서 公選되는가?”를 물으면서 “추호도 근거 없는 私人으로써 중국대표를 모칭”하였다고 강하게 비난하였다.¹⁰³⁾

그런데 러시아는 이와 다른 시각에서 대표 문제를 제기하였다. 중국 대표의 자격 문제에 매우 비판적이었던 중국의 여론과는 달리 러시아는 일본이나 중국의 대표는 “본국 정부의 양해”를 얻었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하였다. 그러나 중국 대표의 경우에도 각 성에서 공인받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중국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대표성을 인정하였지만, 인도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출석 대표

100) 내무성 경보국, 위의 책, 71쪽

101) 위의 책, 65쪽 및 70쪽 참조 對日外交市民大會의 아세아민족회의에 반대하는 전문도 이와 관련 하여 주목된다. 내무성 경보국, 위의 책, 73~74쪽 참고로 상해에 거주하는 대만인 사상단체는 아시아연맹이 일본의 한 기관이라고 인정하고 대만인 민중은 참가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고 불참가성명을 중국신문에 발표하였지만, 대부분의 상해 거주 대만인들은 거의 이에 무관심하였다. 같은 책, 67쪽

102)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상해특별시당부는 선전부장 陳德徵 명의의 성명에서 “다른 것은 그만 두고 단순히 중국대표에 관하여 말하면 황공소라는 자는 누가 그를 천거하여 중화민족의 대표로 했는가? 당부의 위임도 받지 않았고 법정 단체나 직업단체의 推選하는 것도 아니다”고 하여 대표성을 문제로 삼았다. 각각 위의 책, 71쪽 및 75쪽 참조

103) 위의 책, 73쪽

는 자국 정부나 국민의 인정을 받지 않았다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순연한 민족해방회의의 본질을 잃어 기대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서 이 회의가 아시아 민족 일반의 요망이 아니고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개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¹⁰⁴⁾

사정이 이러했기 때문에 일본 관헌의 보고서조차도 이 회의에 대하여 매우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상해회의의 전 과정을 보고한 바 있었던 내무성 경보국은 “각각 상이한 사정에 놓인 아시아 여러 민족이 권위가 결핍한 한 민중적 회합을 거듭하면서 전아시아 공통 안건을 논의하고 나아가서 이들 민족을 본 연맹에 포용하고 일본에서 이를 영도하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며 “하물며 어느 곳에서 회의를 거듭하더라도 空漠한 이상론의 논의를 시도할 뿐으로 약소민족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아가서 이 보고서는 특히 이시아의 연합에서 “주된 제휴자여야 할 중국관민”의 부정적 반응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종류의 회의를 거듭할수록 점점 민중의 반감을 도발하고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따름으로 오히려 중국의 대일감정에 악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관계가 더욱 복잡화해 가는 오늘날 이런 종류 內情의 회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던 것이다.¹⁰⁵⁾

VI. 맺음말: 아시아연대에 대한 교훈

아시아민족회의와 아시아연맹에 참가한 각 국가/민족 대표들을 보면 일본의 경우 정우회라는 정당의 배경을 논외로 하더라도 정치인과 실업가, 학자, 언론인 등이 주로 참가하였다. 이른바 시민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민간 조직들에 관계하였던 인물들이 다수였다고 하더라도, 회의를 주도한 것은 아무래도 정치인들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간단체에 속했던 인물들도 이러저러한 형태로 정부나

104) 위의 책, 66쪽

105) 위의 책, 70쪽 참조 이 회의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 것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중국의 강한 반발도 있었지만, 일본 내부에서의 이러한 판단도 적지 않은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당과 연계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시정부나 성정부의 관계 인물들이 주도하면서, 학계와 언론계, 실업계 인사들이 참가하였다는 점에서 일본에 못지않게 민간적 성격이 덜했다. 그 밖의 나라 민족들의 경우는 대표라기보다는 일본이나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망명자나 ‘정치난민, 혹은 조선의 경우는 직업적 친일분자와 같은 인물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들 모두는 정부나 정계 인사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변적 성격이 강한 인물들이었다. 이 점은 비슷한 시기 미국이 주도한 태평양회의와 태평양문제연구회에 참여한 일본이나 중국 대표들과 비교할 때 일정한 대조를 이룬다. 비록 일정한 한계는 있었다 하더라도 태평양문제연구회에 참가한 지식인들이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자립적 가치와 개인의 인격에 바탕을 둔 시민사회적 지향이 강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이 주도한 아시아민족회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개인이 국가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바로서의 정부기구적 성격을 보였던 것이다.

아시아민족회의가 비록 민간의 주도에 의한 비정부기구의 성격을 표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강력한 국가주의/민족주의적 성향이 회의를 지배하였다. 이 점은 상대적으로 관변적 성격이 덜한 것으로 보였던 일본의 경우에도 그러했지만, 문제는 이러한 국가중심의 생각이 비단 회의에 직접 관계한 인물들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대관매일신문』이 “아세아 연맹을 조직할 것은 민간의 정치기관에 의해 대표되는 회의가 아니라 정부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혹은 아시아민족회의가 “일부에 국한되는 한은 하나의 연구회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어조의 사실을 게재했던 것은¹⁰⁶⁾ 이러한 지향을 단적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개인의 참여나 민간의 자율보다는 국가의 관여나 정부의 주도에 훨씬 더 강한 신뢰를 표명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아시아민족회의는 아시아주의로 일컬을 수 있는 이념이나 사상의 기반에 의해 추동되었다. 아시아민족회의는 일본에서 아시아주의자들이 주도했으며,¹⁰⁷⁾ 회의에 대한 일본 언론의 논조도 대부분 아시아주의적 입장을 고수하였다.

106) 비슷한 맥락에서 『야まと新聞』이 아시아민족회의는 “비공식적인 유지의 회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하였던 것 역시 국가주의 사상의 일단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내무성 경보국, 제50호, 110쪽 및 水野直樹, 앞의 글, 520쪽 참조.

이들은 서구 대 아시아, 백인 대 유색인종이라는 도식에서 아시아를 인식하고 아시아의 동일성과 공통성을 자명한 것으로 전제하였다. 태평양문제연구회에 참가한 대다수 지식인들이 서구와 근대를 지향하였던 것과 대조적으로 아시아민족회의의 관계자들은 상대적으로 아시아와 전통을 강조하였다. 아시아만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이 이론이 지니는 편협한 특수주의의 한계는 자명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신문 사설에서 보듯이 그것은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조선이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다른 국가/민족들에게도 일정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었다

황색 인종, 또는 일반 유색인종의 대동단결을 절규하여 저 백인의 횡포에 대항하려는 기세를 보이는 것은 이론으로서 당연할 뿐 아니라 일반 유색인종의 자위를 위하여 반드시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최후의 활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운이 아직도 촉진치 못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면 물론 일반 유색인종의 자각이 부족한 것이 그 큰 원인이 어니와 적어도 아세아의 전국면에 있어서는 일본이 취한 제국주의적 침략주의가 이상의 기운을 저해한 것이다. 이 점에 있어 일본은 아세아 전민족의 죄인이다.¹⁰⁸⁾

그러나 아시아주의의 이상과 실제 사이에는 치명적인 분열과 모순이 있었다. 일본은 아시아주의를 표방하면서 아시아의 부흥을 위해서는 아시아민족이 단결해야 하고, 일본이 그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선과 중국을 비롯하여 제국주의의 억압 아래 있었던 국가/민족들은 아시아의 동일성과 단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서구를 모방한 제국주의 정책을 포기해야 하며, 아시아의 맹주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위의 사설에서 제국주의 침략의 길로 나선 일본을 ‘아시아 전민족의 죄인’으로 단죄하였던 것은 이러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이들 피압박 민족 국가들에게 아시아는 하나라기

107) 이와 관련하여 1926년 8월 4일자 러시아 『에에호』지는 논평을 통해 일본이 내세운 아시아주의와 서구를 포함한 국제주의 사이의 모순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즉 아시아주의를 내세우며 아시아민족회의를 주도한 “일본은 국제연맹에 가입하여 상임이사이므로 아세아연맹은 당연 국제연맹의 부속물로 되며 따라서 범아세아주의는 연기와 같이 흩어”진다는 것이다 내무성 경보국, 위의 책, 109쪽 참조

108) 「사이비적인 아세아연맹론」, 동아일보 1924년 5월 2일자 사설 정진석 편 『일제시대 민족지 압수기사모음II』(LG상남언론재단 1998), 84~85쪽

보다는 제국주의 대 피압박 민족으로 분열된 것이었으며, 이후의 역사적 경험은 이를 입증하였다.

아시아주의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이러한 괴리는 한편으로는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피압박 아시아의 민족/국가들의 불신을 심화시켰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조선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피압박민족들 사이의 상호 연대를 위한 노력을 촉진하였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본문에서 보았듯이 일본의 언론이 조선·중국에서 아시아민족회의에 대한 비판에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과 조선에서는 상호의 의견과 정보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중국의 동향이 조선신문에 보도되고 거꾸로 조선의 움직임이 중국신문에서 언급되는 양상을 보였다.¹⁰⁹⁾

피압박 민족/국가들 내부에서 상호 이해와 연대를 위한 시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과 다른 아시아 민족/국가들 사이에는 상호 불신과 대립 관계가 조성되었다. 일본에서 아시아민족회의에 관계한 인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대중의 차원에서조차 조선이나 중국에서 전개된 반제 운동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으며,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독단이나 망언의 차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선이나 중국은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제안이라도 제국주의 침략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여 그것에 항의하고 반대하였다. 이러한 상호 불신과 대립 관계는 1945년 이후 일본의 패전과 아시아 민족들의 해방 이후에도 일정한 형태로 지속되었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시대일보, 조선일보, 요미우리(讀書)신문, *New York Times*

김경일, 「식민지 시기 국제 민간 기구의 내용과 성격: 태평양문제연구소(IPR)와 태평양회의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39집, 2004.

김경일·강창일, 「동아시아에서 아시아주의: 1870~1945년의 일본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제8호, 2000.

김대상, 「박춘금: 강파에서 일본 국회의원까지 된 극렬 친일파」, 만민족문제연구소 엮음, 『친일파

109) 水野直樹, 앞의 글, 544쪽 참조

- 99인(2)』, 돌베개, 1993.
- 김상태 편역, 『윤치호 일기 1916~1943: 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통해 본 식민지 시기』, 역사비평사, 2001.
- 정운현, 「주먹으로 오른 ‘친일배의 정상: 제일 친일파 거두 박춘금」, 『나는 황국신민이로소이다- 새로 밝혀 다시 쓴 친일인물사』, 개마고원, 1999
- 정진석 편, 『일제시대 민족지 압수기사모음』, LG상남언론재단, 1998.
- 橋川文三, 「大東亞共榮圈の理念と實態」, 『日本歴史』 21, 岩波書店, 1977.
- 近代日本社會運動史人物大事典 編輯委員會, 『近代日本社會運動史人物大事典』 제3권, 日外アソシエツ, 1997.
- 內務省 警保局 編, 「上海における第二回亞細亞民族會議の情況」, 『外事警察報』, 第67号 東京 不二出版, 1928년 1월
- 內務省 警保局 編, 「亞細亞民族會議概況」, 『外事警察報』, 第50号 東京 不二出版, 1926년 8월
- 孫安石, 「1920年代 上海の中朝連帶組織 中韓國民互助社の成立 構成 活動を中心に」, 『中國研究月報』 Vol. 50, No. 1, 1996년 1月号
- 松尾尊允, 「コスモ俱樂部小史」, 『京都橋女子大學研究紀要』 第26号, 1999.
- 水野直樹, 「1920年代日本・朝鮮・中國におけるアジア認識の一斷面 - 아시아民族會議をめぐる三國の論調」, 古屋哲夫 編, 『近代日本のアジア認識』, 東京: 綠蔭書房, 1996.
- 黑龍會 編, 『東亞先覺志士記傳(下)』, 東京: 原書房, 1966.
- Goodman, Grant K., “The Pan-Asiatic Conference of 1926 at Nagasaki,” 福岡ユネスコ協會, *Fukuoka Unesco*, 제8호, 1973.
- Lebra, Joyce Chapman, *Jungle Alliance: Japan and the Indian National Army*, Singapore: D. Moore for Asia Pacific Press, 1971.
- Nair, Ayyappanpillai Madhavan, *An Indian Fighter in Japan* (김세중 역 『인도독립투쟁』, 일월서각, 1986).

● 투고일 : 2004. 6. 15.

● 심사완료일 : 2004. 8. 18.

● 주제어(keyword) : 아시아주의(Asianism), 아시아민족회의(Pan-Asiatic Conference), 아시아연맹(Pan-Asiatic Society), 동아시아(East Asia) 일본제국주의(Japanese Imperialism)